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지난 2005년 4월 27일 광주비엔날레 재단회의실. 제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뽑는 프리젠테이션장(場)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한 후보는 3명.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국내의 유명 기획자들이지만 이날 만큼은 입사면접을 치르는 구직자였다. 재단 이사들 앞에서 '만약 내가 예술감독이 된다면'식의 발표를 마친 후보들은 대기장소로 돌아가 '간택'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 같은 모습은 비단 2005년 만의 상황은 아니다. 95년 창설 이후 공모제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예술감독을 뽑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낯익은 풍경이다.

'미술계 안티' 양산한 비엔날레

하지만 미술계 일각에선 이 공모제가 후보들에게 굴욕감을 준다며 골치아픈 시선을 보냈다. 아무리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란 타이틀이 달콤할 지언정 수십 년간 큐레이터로서 잔뼈가 굵은 후보에게 기획자로서의 철학과 어학 수준을 테스트하

는 질문이 유쾌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예술감독으로 낙점되면 본전이다. 탈락한 후보들은 무슨 큰 훈격이라도 있는 것 마냥 미술동네의 입방아에 오른다. 재단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일부

비엔날레, 초심으로 돌아가라

후보는 '안티 광주비엔날레'로 돌아선다.

이 때문일까. 언제부턴가 광주비엔날레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국내 미술계의 무관심은 지난해 7월 광주발(發) '신경아 스캔들'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1차 감독후보 추천과정에서 '인물난'에 허덕인 재단이 추가로 후보들을 리스트에 올리면서 신경아씨가 '깜짝 합류'했고 재단의 검증 시스템 부재로 가져박사를 예술감독에 선임한 것이다.

하지만 신경아씨 사건은 창설 13년만에 처음으로 예술감독 선정방식에 메스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비엔날레의 성격이 180도 달라지는, 더 이상 예술감독들의 '미학 실험장'이어서 안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것이다. 세계 미술 흐름을 꿰뚫는 '싱크탱크'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를 구현할 역량 있는 예술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북받쳐들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지난달 28일 재단은 정책기획실 설립, 명예이사장과 이사장직의 통합, 문화CEO 영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장이 이사장으로서 기금조성 등 대

재단 이사회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이사회의 위상은 그대로 두고 정책기획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무늬만 개혁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직의 슬립화'라는 명분에 밀려 팀장급 1명, 연구원 1~2명으로 묶어 놓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연 이 인력규모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혁 청사진, 용두사미 되나

여기에 문화CEO를 둘러싼 재단 안팎의 미묘한 분위기도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책기획실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비엔날레를 취락과(?)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정체성' 출현에 관심이 더 뜨겁다. 임명권자인 박광대 광주시장의 러브콜을 받기 위한 미술계 인사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이스탄불 비엔날레가 국제 미술계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데에는 조직내 싱크탱크의 역할이 크다. 감독이 바뀌더라도 이들 비엔날레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의 개혁카드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책기획실의 설립취지를 100% 살려야 한다. 재단이 초심(初心)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시설

전남도 장기발전 계획 구체적 전략 세워야

전남도가 잇따라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과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안' 등 장기 종합발전 청사진을 밝혔다.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필요충분 조건인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광역도시화에 대한 장기 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크게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24만4천13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 기획단과 추진단을 만들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세부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2025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전남 서남권 7개 시·군을 오는 2025년까지 인구 108만 명의 광역도시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서남권을 현재 추진 중인 해남·화진·조선클러스터와 무안기업도시 등을 통합하고 이와 함께 4개 관광광역을 개발해 산업·관광이 결합한 광역도시화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이 같은 종합발전 계획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일자리 창출 없이는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서남권 광역도시화 역시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옳다. 특히 장기적인 추진 방안이 따라 차별하게 추진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서남권 광역도시화는 말만 걸고 쉬운 일이 아니다. 5년 동안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업원 5천명 규모의 대기업 8~10개를 유치해야 한다.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서남권 광역도시화도 천문학적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재원마련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개발은 맞물려 있다. 전남도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 정부가 나서라

광주·전남 대학가가 등록금 문제로 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 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연례행사'가 된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가파르다. 대학들은 매년 등록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몇 배씩 인상해 왔다. 지난 2004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대학이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을 정도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목표대 14.2%를 비롯 전남대 8.6%, 광주여대 8%, 호남대 6.9%, 광주대·동신대 6.5%, 광주교대 10%, 조선대 7% 등으로

조선대의 경우 7%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의치학계열의 등록금은 1천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방에서도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고교비와 용돈 등을 포함하면 대학생 1명당 연간 교육비가 1천500만원에 달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대출받은 학자금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학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이 전국적으로 3만2천382명에 달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민생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학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학업의 중도에 포기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안 된다.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노블레스는 원래 '귀족'이란 뜻이고, 오블리주는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프랑스의 작가 가스통 페르에 마르코로 알려져 있다. 그가 1808년 고귀한 신분에서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쓰기 시작해 오늘에 이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의 2000년 역사를 되짚어볼 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라고 꼽는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장의 선봉에서 서서 용감하게 적과 싸웠다. 이런 정신 때문에 로마에서는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역사가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회맹으로 대표되는 신라 지배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사회가 변하면서 귀족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유명무실해졌고 오늘날에는 포괄적 의미의 사회지도층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부나 권력 또는 명예를 갖고 있는 지도층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무를 의미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최근 대표들과 중진들을 향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언급하며 수도권 출마를 권유,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당원들은 쇠신의 대상이 되는데 자기는 편하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

당에 환원하고 전장의 선봉에서 서서 용감하게 적과 싸웠다. 이런 정신 때문에 로마에서는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역사가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회맹으로 대표되는 신라 지배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가 된 중진들, 그들의 아름다운 선배가 표심을 바꾸고 당을 구하지 않을까.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고

안병량



흔히 가족 질병과 관련해 '청정국'이란 용어를 자주 쓴다. 이는 국가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청정국 나라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모두 청정국 지위에 있다.

구제역은 1933년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 15건, 2002년에 16건이 발생해 모두 4천400여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왔다.

당시 돼지고기 수출중단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구

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축산여건이 어려울수록 질병관리는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며 가족 질병관리를 철저히 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는 오히려 질병관리를 소홀히 해 질병이 다발하고 스스로 방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생산성마저 하락해 수익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진 게 사실이다.

오늘은 경칩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봄기운이 가득 차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한 축사에서 움츠렸던 가족들도 활동하기 좋은 계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들이 있어 봄은 각

왜 구제역 청정국인가

모가 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 우제류(偶蹄類)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에게에는 해가 없다.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는 가공축산물이나 살아있는 가축을 수입할 때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역과 검사를 요구하는 등 국제교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을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질병이라고도 부른다.

지난해에는 한미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대체식품인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가격하락 충격을 줄이고, 특히 쇠고기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민·관·학계·단체 등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았었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06년 하반기 이후 축산물 생산비의 30~50%를 정도를 차지하는 배합 사료의 가격인상에 따라 축산농가의 고

중 질병에 빨간 불을 켜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구제역 예방방지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만 미룰 일이 아니라, 최일선 현장인 농장에서 철물방어를 해야 한다.

특히 봄철에 소독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겨우내 손이 미치지 못했던 축사내에 분변 등 유기물을 먼저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계 157개 OIE 회원국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유지는 각종 농자재와 사료가격 인상 등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잃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어제 전남농협에서 도내 축협 방역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특별방역 결의대회를 가졌다. 축산농가들이 '생산성 향상은 질병관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농협 전남본부 축산지원팀장>

준법의식 갖춰 법질서 후진국 오명 벗자

어느덧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차츰 초록빛으로 변해 가는 자연은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도 녹이고 들뜨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쓰레기, 오물이 나뒹굴어 모처럼 자연을 찾는 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자신만 조금 편하려고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법질서 지키기 수준은 OECD 가입 30개국 중 27위를 최하위 수준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은 3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의 단속을 떠나 선진국민답게 타인을 배려하며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한다. 법질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때다.

올해는 대한민국 탄생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뜻 깊은 해이다. 국민들이 기초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재호·영광경찰서 서부지구대

은펜칼럼

류동훈



필자에게는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동생이 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필자와 막내, 그리고 여동생 셋이서 함께 자취를 했다. 살림살이를 도맡아 고생을 했던 그 여동생이 오는 6월 결혼을 한다. 예비신랑도 광주 사람인데, 취업에 대전을 하게 돼 신집살림은 대전에 차리게 되었다. '살다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혼자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동안 고생만 시킨 오빠는 마음이 애처롭다.

그래서 예비신랑에게 도대체 왜 대전으로 갔나. 광주에는 취직할 곳이 없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예비신랑은 고개를 떨구며 광주에서 취직하려고 노력

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데 호남의 발전이 이끌어내는데 있어 비판과 견제만이 능사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제 호남인들은 실사구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호남을 고립화시키면 시급수록 다른 지방에서 많은 득표를 하여 영구집권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과 소통이 가능한 현재 여권의 주요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 주요 요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천거해야 한다.

대전으로 시집가는 동생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갔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난 대선 결과를 바라보며 또다시 호남 소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문화도시조성위 폐지 사건 때 광주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시위하고 항의했다. 다른 지방에서 볼 때 광주사람들의 지역이주의로 비쳐진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항의와 함께 문화도시 성공을 위해 광주사람들이 정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진정성도 보여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5·18 시민헌혈을 부활시킨 대대적인 시민헌혈과 같은 행사도 함께 하였던다면 다른 지방 사람들과 이명박 정부의 진심어린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요즘 이명박정부 견제론이 지방 정치

중심 결과는 특정정당에 물표가 가는 것보다는 각 정당들이 적절히 긴장할 수 있는 득표수가 지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통합 민주당 공천에 가 있는 동안에 한나라당 안에 있는 호남 인물들은 찬밥 대우를 받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천대받는 인물들이 어떻게 중앙 무대에서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민의 기대를 위해 뉘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앞으로 5년 이명박 정부에서 호남은 후퇴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생존방범을 구사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지방에 가족을 보내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 <새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2006년 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인터넷 전화, 114 자동연결 서비스 안돼 불편

최근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서 전화도 인터넷전화로 바꿨다. 인터넷전화를통하고 보니 종전의 일반전화와 다르게 불편도 뒤따랐다.

대표적으로 일반전화는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때 안내원의 육성안내에 이어 1번을 누르면 안내해준 곳에 바로 연결해준다. 안내받은 번호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는 번호안내후 자동연결 서비스가 없다. 처음엔 서비스 장애라

하고 몇차례 시도해 봤으니 안되기에 인터넷전화 업체에 확인해 봤더니 자동연결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편 때문에 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있어 변경하기가 어렵다. IT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IT기술이 이런 자동연결 서비스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않는다.

업체간 경쟁을 떠나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삼남심·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